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수요 분석 및 정책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 분야의 재정투자는 영유아기의 보육서비스와 가정 양육수당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 양육비 현금지원은 최소한 초등학교,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학교,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최소한 초등학교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장애아(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고위험군 아동(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대한 지원은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하고, 신생아기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영유아기 자녀나 보편적 의료지원과 등하원서비스, 초등학교 자녀는 방과후 돌봄의 보편적 지원, 고등학교기에는 교육비 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1. 서론

최근 마련된 저출산 대책들은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와 지원 분야를 확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대표적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층 대상의 고용 및 주거대책이 새롭게 강조되고, 2016년에 발표된 “출산을 제고 위한 보완대책” 등에서는 난임 지원 및 임신·출산 등에 보다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1)</sup> 이러한 저출산 대응의 범위 확장은 저출산 현상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 저출산 대응의 핵심인 돌봄지원이 현행 수준으로 온전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돌봄지원 분야의 재정투자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었으나, 자녀 양육기는 영유아기 이외에도 신생아로부터 학령기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돌봄지원 욕구도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존재한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자녀양육 단계별로 돌봄지원 수요를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새롭게 추가해야 할 지원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부부를 포함한 정책 수요자들이 “희망

1) 보건복지부(2016).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데”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때 세부 지원내용들은 2017년 기준 중앙정부의 지원내용 이외에도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출산장려 분야 자체사업 중 공통된 사업들을 파악하여 전국적인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2. 자녀돌봄 지원 정책 현황

저출산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돌봄 지원의 방향 및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2017년 기준으로 각 사업별 재정투자 비중과 지원대상(아동연령, 소득기준) 범위를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 가. 방향성 및 중점과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돌봄지원 분야는 제1, 2차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20).<sup>2)</sup> 제1차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부터 영유아 전(全)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등저학년 돌봄 여건이 미흡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대한민국정

부, 2016: 21-22),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용가능성이 낮은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24). 이에 따라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과 보육 환경의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질 높은 시설보육의 다양화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학생 등 보육 사각지대 해소, 초등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질 제고, 공동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내실화와 민간시장 관리(대한민국정부, 2016: 79), 육아 휴직제도의 남성 이용 활성화, 이용기간, 급여 수준, 재원 기반, 사각지대 해소 등이 그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55).

### 나. 세부 지원내용

자녀양육 단계별 현행 돌봄지원 제도 및 사업을 종합하고 주목할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돌봄 지원의 재정투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다양한 지원 부문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영유아기에는 다양한 아동관련 수당과 세제지원, 보편적 보육서비스, 가정내 양육지원(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휴가·휴직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및 관련 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및 의료지원(입원비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도 제공된다. 또한 돌봄취약계층 대상 지원 즉 저소득층 대상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및 휴식지원

2)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표 1〉 자녀양육 단계별 주요사업 및 예산(2017)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적용대상 아동연령				2017년 예산	비중
		0~2세	3~5세	6~12세	13~16세		
임신·출산 진료비						1,200	0.02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2,400	0.20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38,800	0.64
고위험군 산모신생아지원						13,900	0.23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12,242.00	20.18
시간제보육						8,800	0.1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5,085	0.2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00	0.38
0~5세 보육료 지원						31,292.00	51.58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000	0.0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82	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중앙)						1,220	0.02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442.00	4.03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92,500	1.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4,572	0.9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8세)	1,472.00	2.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세~)	18,026	0.30
초등돌봄교실						5,886.00	9.70
방과후 학교						1,305.00	2.15
방과후 수강권					(~18세)	1,947.00	3.21
교육급여						127,576	2.10
합계						6,066,861	100.0

자료: 유해미·최호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98-99 ; 보건복지부(2016).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교육부(2016). 보도자료: 2017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2016. 8. 30)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검색일자 2017년 6월 1일)

서비스, 부모 상담, 언어발달 및 발달재활서비스도 제공된다.

관련 예산 비중은 0~5세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각각 약 51.6%와 20.2%로 총 71.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이 9.7%이고 이외 사업들은 5% 이하 수준이다. 그러므로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가 실제 영유아기에 집중되는지, 그리고 각 양육단계별로 간과된 욕구는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내용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을 둔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돌봄지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테면 초등 또는 중고등학령기까지 지원되는 교육급여, 급식비,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된다.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은 맞벌이와 취약계층 가구(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장애 등)에 한정되며,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관련 서비스도 저소득층 가구에만 지원된다. 따라서 현행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는 각종 돌봄 지원이 보편적인 수요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2〉 돌봄지원 분야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소득기준(2017)

구분		소득 기준	
양육 단계	지원내용	선별적	보편적
산모 및 신생아	임신·출산 진료비 일부 지원		○
	아동입원비 일부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0~2세아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
	시간제보육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	
0~5세아	0~5세 보육료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중위소득 4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30%	
	영양플러스 사업	중위소득 80%	
0~12세아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아동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6~12세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9~15세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저소득층 가구 우선	
	방과후 수강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17세아	학교급식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0~17세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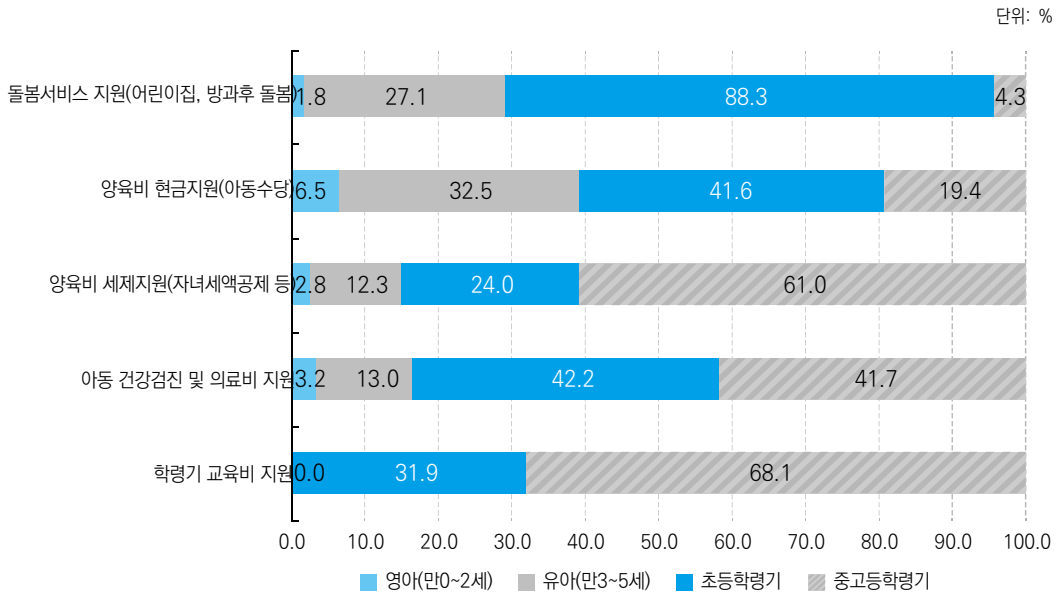
자료: 유해미 최효미 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02.

### 3.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수요

이하는 전국 지역의 예비부모(첫 자녀 출산이 전 부부), 영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 중 1인을 선정하여 각 그룹별로 3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이다<sup>3)</sup>.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데 현행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관련 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추가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출산 및 육아 분야 자체사업<sup>4)</sup>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시 도움정도를 분석하였다.

### 가. 자녀돌봄 지원의 도움정도 및 필요도

우선 자녀양육 단계별로 주요 돌봄지원(돌봄서비스, 양육비 현금지원, 양육비 세지원, 아동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학령기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다. 즉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가 66.8%,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가 41.6%, 만 5세까지 32.5% 순이었다.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교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0%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42.2%, 중·고등학교 41.7%로 유사한 응답율을 보였다.



자료: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1] 양육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필요도

3) 이하 조사결과는 2017년에 수행된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4) 해당 사업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시책 사례집”(보건복지부, 2017)의 출산 및 육아지원 부문의 자체사업 중 지역별로 공통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함.

다음으로 현행 중앙정부의 세부 지원별로 출산 및 양육시의 필요도를 7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평균 5점 이상

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평균 6.2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세제지원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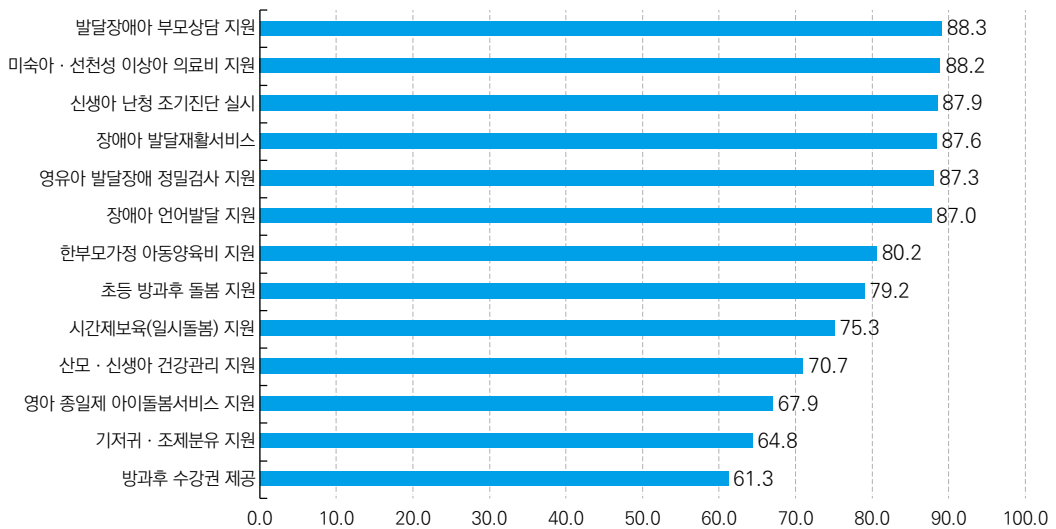
〈표 3〉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7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0.2	0.6	1.5	9.7	17.0	20.7	50.4	100.0(1,200)	6.06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0.3	0.7	2.3	11.4	17.6	22.9	44.9	100.0(1,200)	5.94
출산용품 지원	0.9	1.2	3.6	18.1	21.4	20.7	34.2	100.0(1,200)	5.5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0.8	1.1	3.6	14.9	21.6	21.8	36.3	100.0(1,200)	5.6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	1.0	2.0	10.9	21.5	28.0	35.6	100.0(1,200)	5.77
일시돌봄(시간제보육) 지원	0.3	0.8	2.7	12.6	22.8	24.8	36.1	100.0(1,200)	5.75
양육비 현금지원	0.8	1.1	2.8	10.8	14.8	22.0	47.9	100.0(1,200)	5.95
양육비 세제지원	0.0	0.3	1.7	7.9	13.8	23.5	52.9	100.0(1,200)	6.17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0.1	0.5	0.8	6.8	12.3	23.8	55.8	100.0(1,200)	6.25
영유아 보육료 지원	0.5	0.8	1.5	9.0	15.2	24.0	49.1	100.0(1,200)	6.06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0.3	0.6	1.1	9.3	16.5	25.5	46.8	100.0(1,200)	6.05
학령기 교육비 지원	0.2	0.8	0.9	8.3	14.8	24.8	50.3	100.0(1,200)	6.1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단위: %



자료: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2〕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

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6.12점,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히 6.06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0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현행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거나 향후 전(全)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장애아와 고위험군 아동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88.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8.2%,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87.9%,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87.6%,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87.3%,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87.0%,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87.0% 순으로 전(全)계층 지원 확대에 동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방과후 수강권과 기저귀 조제분위 지원은 각각 64.8%와 6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 나. 추가지원 요구: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도움정도 인식

전국적으로 확산할만한 추가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중 출산 및 육아 분야 사업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는 데 각 출산지원 정책 및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94점(만점 7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 지원 3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6% 순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 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영유아 대상무료 독감 예방이 평균 6.04점(만점 7점)이고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86점, 상해보험료 등

〈표 4〉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자녀 출산에의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매우 도움됨		평균 (7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출산지원금(일시금)	3.0	2.2	3.8	15.8	19.3	22.5	33.5	100.0(1,200)	5.48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6.0	6.3	6.5	24.7	19.4	14.8	22.3	100.0(1,200)	4.79
아동수당(매월 지급)	1.3	1.8	2.7	13.8	16.3	22.0	42.3	100.0(1,200)	5.77
산후조리원 지원	2.4	2.5	2.7	14.9	20.6	20.2	36.8	100.0(1,200)	5.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4	2.3	4.2	16.9	23.4	21.3	29.6	100.0(1,200)	5.39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3.3	4.0	6.3	21.4	22.1	17.5	25.4	100.0(1,200)	5.09
유축기 대여	3.9	4.2	6.9	24.8	19.7	16.6	24.0	100.0(1,200)	4.98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1.0	1.2	2.7	8.5	17.5	23.4	45.8	100.0(1,200)	5.94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5〉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자녀 양육에의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7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생아 안심보육료지원	0.8	1.6	3.3	14.7	25.3	21.8	32.7	100.0(1,200)	5.58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5	0.8	1.8	11.6	20.3	24.3	40.6	100.0(1,200)	5.86
맞벌이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1.0	2.3	2.6	15.7	19.7	22.1	36.8	100.0(1,200)	5.64
영유아 무료 독감 예방접종	0.1	0.8	1.9	9.0	16.6	24.3	47.3	100.0(1,200)	6.04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1.3	3.2	4.9	23.3	22.0	20.8	24.5	100.0(1,200)	5.22
장난감 대여	1.2	3.2	4.8	24.0	22.3	20.7	24.0	100.0(1,200)	5.21
영유아 학습비 지원	1.0	1.7	3.8	14.4	22.5	25.0	31.7	100.0(1,200)	5.57
북스타트	0.9	2.3	3.7	18.8	25.6	22.4	26.3	100.0(1,200)	5.3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0.6	1.3	3.1	15.7	20.2	26.0	33.2	100.0(1,200)	5.64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1.0	2.2	4.3	18.9	23.3	22.0	28.3	100.0(1,200)	5.40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	1.2	1.1	2.9	15.3	21.6	23.4	34.6	100.0(1,200)	5.64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	1.3	1.8	3.0	15.3	19.7	23.4	35.5	100.0(1,200)	5.6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5.58점 순이었다.

## 4. 정책 과제

### 가. 자녀돌봄 지원의 방향 및 전략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은 각 양육 단계별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주요 돌봄지원 분야별로 그 적용시기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돌봄지원의 범위는 출산 및 신생아기,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시기별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돌봄지원을 보다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초등 방과후돌봄 위주로 제공되는

것이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나, 이외 돌봄지원 분야에서는 현재의 지원범위가 수요자 욕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양육비 현금지원의 경우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새롭게 도입될 아동수당제도의 적용대상이 미취학 아동(만 0~5세)에 한정되므로,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에 양육비 세제지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추가공제 등의 적용기준을 영유아에 한정하지 말고 중고등학령기 자녀까지 적극적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아동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주로 신생아와 영유아에 한정되나, 초등학령기 나아가 중고등학령기로 확대되어야 하며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령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자녀돌봄 지원 강화의 우선순위

중앙정부의 현행 돌봄지원 전반의 부모 필요도 인식 조사결과를 반영하되, 출산율 제고 효과 측면에서 세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양육기 전반에 걸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제도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6.25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이 6.12점, 보육료 지원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 공히 6.06점, 초등방과후 돌봄지원 6.0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위주에서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강화 → 초등방과후 돌봄지원 → 학령기 교육비 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순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 자녀양육 단계별 정책 과제

### 1) 출산·신생아기 지원

출산·신생아 지원은 영유아기와 초등학령기 자녀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첫째 자녀부터의 출산지원 요구가 높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지원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적용되나, 보편적 지원 확대에 부모들이 동의한 비율은 88.2%로 높게 나타나므로 보편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만하다. 또한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의 현행 소득기준은 60% 이하에 그치고 있으나, 보편적 지원 확대에 부모는 8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원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추구한다. 이를 반영하면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에 제시된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자동화이용향 방사검사 및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될만하다(대한민국정부, 2016: 70).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의 경우는 높은 수요를 나타내므로, 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80%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19년까지 확대하며, 지원대상을 기존 산후돌봄에 더하여 임신부터 만 2세 방문형 건강관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앞서 다룬 수요에도 부합하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국정자문위원회, 2017: 154). 또한 지원기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29.3%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대한민국정부, 2016: 69), 현행 한자녀 기준으로 12일에서 15일까지 늘리고, 쌍생아는 18일, 셋쌍둥이는 24일 등 출생아수를 반영하여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중 0세아 의료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한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관련 사업의 확장을 모색한다.

### 2) 영유아기 자녀

영유아기는 돌봄지원이 집중된 시기로서 이 외 양육단계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지원들을 포괄하고 있으나, 특히 의료지원 분야는 보편적인 수요로 파악되나, 현행 지원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 1명당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65).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모색한다. 또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 지원되나, 보편적 지원에 동의한 비율이 75.3%로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는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되나, 전계층 확대에 동의한 비율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할만하다. 또한 현행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과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지원되는데, 이들 대상의 확대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하원(교)서비스 제공은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들 사업의 확장을 모색한다.

### 3) 학령기 자녀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현재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 부모들의 수요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하면,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과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학령기 자녀의 의료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토록 한다(국정자문위원회, 2017: 154).

첫째, 저출산 대책에서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돌봄지원에 방과후 돌봄이 주를 이루나, 현물 및 현금지원과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해당 시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므로, 지원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령기 돌봄지원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질 제고와 연계 체계 강화가 유일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원수준 측면에서 초·중·고등학교 돌봄지원은 보편적 수요로 파악되므로 현행 저소득층 가구 위주의 지원에서 그 대상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돌봄지원 분야에서 중고등학교 학령기는 교육비 지원이 주를 이루며,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제외하면, 해당 시기의 돌봄 지원은 방과후 수강권과 교육급여가 유일하다. 또한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지원과 현물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므로, 이들 지원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당 시기의 지원으로는 교육개혁이 제시되며, 이때 주요내용은 공교육 만족도 제고와 역량 강화, 교육체계 개선 등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교육비 지원 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므로(국정자문위원회, 2017: 82),<sup>5)</sup> 해당 시기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5) 국정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